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 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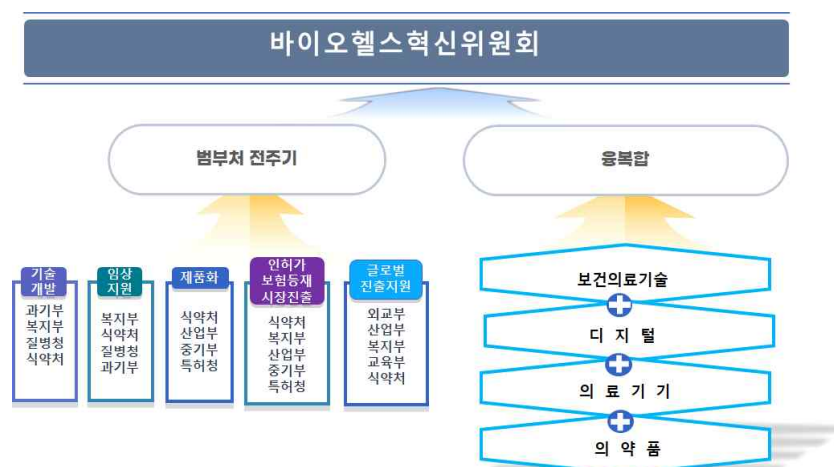
-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설치를 위한 대통령 훈령 제정 -
- 정부 정책의 칸막이 해소로 국가 핵심 전략사업 초석 마련 -

보건복지부(조규홍 장관)는 10월 17일(화)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고 인공지능 기술, 나노기술 등 첨단기술과 바이오헬스와의 융·복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대통령 훈령*이 제정되었다고 밝혔다.

*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61호)

그간 의약품, 의료기기 및 보건의료기술 등의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바이오헬스 업무가 부처별, 분야별, 단계별 칸막이로 가로막혀, 정부 정책이 분절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8일(화) 범부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계기로, 바이오헬스 전(全) 분야를 아우르는 국무총리 주재의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설치를 추진해 왔다.



이번에 설치되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보건복지부를 포함하여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및 질병관리청 등 12개 정부 부처의 장관·현장 및 학계 등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범정부 합동으로 바이오헬스 기술개발, 제품화, 보험등재, 시장진출 등의 전주기 지원을 위한 정책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심의할 예정이다.

황승현 보건복지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은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이 미래먹거리 및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민·관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겠다” 라면서, “11월 중에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시급한 안건부터 논의해 나갈 예정” 이라고 밝혔다.

<붙임>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개요

담당 부서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 기획조정팀	책임자	과 장	민영신 (044-202-1660)
		담당자	사무관	김미선 (044-202-1665)

- (목적) ‘바이오헬스 육성과 바이오헬스와 첨단기술과의 융복합’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무총리 주재 범부처 거버넌스
- (기능) 바이오헬스혁신 정책 및 추진과제 심의·의결

1. 바이오헬스혁신정책의 수립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부처별 추진과제의 수립 및 추진성과 점검에 관한 사항
 3. 바이오헬스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기술개발 및 생산·수급에 관한 사항
 4. 바이오헬스혁신정책 관련 국내 기업·기관·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바이오헬스혁신정책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
- (구성·운영)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각 부처 장관급 외 현장 및 학계 민간전문가 등 3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국무총리
 - (정부위원)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질병관리청 등 12인
 - (민간위원) 17인 이내 위촉
 - (간사) 복지부 보건 의료정책실장
- (추진단)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
 - (단장)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겸임), (부단장) 복지부 4급
 - (단원) 과기부, 산업부 등 관련 부처 공무원
- (향후 추진계획) 위원 위촉 및 1차 위원회 개최(11월 예정)